

2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
발 신 천안문 32주년 공동성명에 참여한 24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천안문 항쟁 32주년, 24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날 짜 2021. 06. 04. (총 3 쪽)

보도자료

한국 2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천안문 32주년을 맞이하여,
중국과 홍콩 당국의 천안문 32주년 추모금지 및
노동운동탄압과 미얀마 군부와 의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 및 성명전달



1. 천안문 항쟁 32주년인 6월 4일 오늘, 홍콩 당국은 매년 개최되던 촛불 추모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홍콩에서 32주년 촛불집회를 조직하던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 부주석 초우항텅(鄒幸彤·36)씨를 6월 4일 아침에 불법집회를 조직한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2. 25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성명을 통해, 홍콩 당국이 2019년 시위 이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민주활동가들을 체포 및 구금한데 이어 천안문 32주년 촛불 추모행사마저 봉쇄하고 있는 것과 중국정부가 본토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에 규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반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3. 24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성명(국/영문본)은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이 6월 4일 오후 3시에 주한중국대사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나현필 사무국장은 오후 7시에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초우항텅 부주석을 포함한 홍콩 민주화 활동가들의 석방과 중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촛불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붙임1. 공동성명서

< 한국 시민사회 공동 성명서 >

천안문 항쟁 32주년,

금지당한 추모와 허용되지 않는 비판, 탄압받는 노동운동.

폭압만을 일삼는 중국 정부를 규탄한다.

6월 4일 오늘은, 1989년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 모인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중국 정부가 무자비하게 진압한 날이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는 등 고통을 당했다. 오늘날까지 중국인들은 ‘6·4’를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6·4는 현재진행형이다.

1989년 이후, 매년 홍콩의 시민들은 6월 4일에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중국의 민주주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올해 홍콩 당국은 매년 빅토리아 공원에서 개최되었던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홍콩에 위치했던 세계 유일의 6.4 기념관을 폐쇄한 것으로 명확하게 집회를 금지한 의도를 드러냈다. 앞으로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행동도 금지하고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홍콩 당국의 조치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2019년에 있었던 홍콩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에, 홍콩 당국은 활동가들을 대대적으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4월 19일 홍콩 노총 사무총장 리척안과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를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9년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홍콩 내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홍콩에서는 일국 양제의 상징이었던 자유로운 선거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억압은 홍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중국 정부는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수많은 노동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이 체포되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일명 ‘자스커지 사건’을 계기로 100명이 넘는 노동운동가와 학생운동가들이 구속 또는 자택연금 조치되었다. 아직까지도 이들의 소식은 접하기 어려운 게 엄연한 사실이다. 지난 3월에도 중국 내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온 배달노동자연맹(外卖骑手联盟)의 천귀장 활동가가 구속되었다.

홍콩과 중국 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 훈센 정권의 독재를 지지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민들을 억압하고 학살하는 세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중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인권신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는 천안문 **32**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홍콩 민주화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홍콩특별행정구 당국은 다가오는 **6월 4일**에 홍콩 시민들의 촛불 행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추모를 보장하라

하나,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아시아 지역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존중하라

2021년 6월 4일

단체 연명 (총 **24**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국경없는인권/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미얀마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손잡고/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 **MWTV**

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천인권영화제/전두환심판국민행동

진보 **3.0**/창작**21**작가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한-홍민주동행/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 붙임2. 공동성명서 영문본

<Joint Statement>

The 32nd anniversary of the Tiananmen Uprising,

Forbidden Remembrance, Prohibited Criticism, Repressed Labor Movement.

We condemn the Chinese government for its routine crackdowns.

Today, June 4, is the day the Chinese government ruthlessly suppressed students and workers who gathered at Tiananmen Gate in Beijing, China, 1989. This resulted in the loss of thousands of lives and the imprisonment of many others. To this day, the aftermath of June 4 is still ongoing, as Chinese people are still unable to say “June 4” without fear of consequence.

Since 1989, the citizens of Hong Kong have held candlelight vigils on June 4 to commemorate the victims and demand democracy in China. This year, however, Hong Kong authorities banned candlelight vigils held annually in Victoria Park. Although the Hong Kong authorities have used COVID prevention as an excuse for this ban, they revealed their true intentions when they also shut down the only June 4 Memorial Hall in Hong Kong. The Hong Kong authorities sent a clear message that they intend to ban and suppress any actions that criticize the Chinese government.

These actions by the Hong Kong authorities are unsurprising. Following the Chinese government's enac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response to the 2019 protests by Hong Kong citizens, the Hong Kong authorities have routinely arrested activists and sentenced them to prison. For example, on April 19, the Secretary General of HKCTU Li Cheuk-yan and Binhua Ilbo owner Jimmy Lai were arrested and sentenced to prison. In the wake of the 2019 demonstrations, the Hong Kong government has made it clear that it will not tolerate any voices criticizing the Chinese government. Now in Hong Kong, the political situation has become so grim that even free elections, previously a symbol of the two nations, can no longer be expected.

This kind of suppress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occur only in Hong Kong. In mainland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suppress the labor movement. Since Xi Jinping took office, numerous labor and human rights activists have been arrested - notably in 2018, more than 100 labor activists and student activists were arrested or placed under home arrest in the wake of the so-called "Jasic Incident." It is still difficult to know the status and whereabouts of these activists. Even last March, the activist Chen Guojiang (陈国江) from the Delivery Workers' Alliance(外卖骑手联盟),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labor rights of delivery workers, was arrested.

This situation is not limited to just Hong Kong and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supports the dictatorship of Cambodia's Hun Sen regime and has close ties with Myanmar's military. The Chinese government's foreign policy of advocating and supporting forces that suppress and slaughter citizens is a major obstacle to the peace and growth of human rights in Asia.

On the 32nd anniversary of Tiananmen Uprising,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 from the Chinese government:

On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immediately release the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One, Hong Kong's special administration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stop suppressing Hong Kong citizens' candlelight vigils on June 4 and ensure free and peaceful memorials

On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top suppressing labor movements in its country and release activists immediately.

On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cease cooperating with Myanmar's military, and respect the aspirations of Asian citize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June 4, 2021

Signed by:

1.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2.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3. Borderless Humanrights
4. CHANGJAK21
5. Dasan Human Rights Center

6. Hongkong-Korea Civic Alliance for Democracy
7.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8.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9.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 10.**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11.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12. Migrant World TV
13.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14. Myanmar Network in Korea
15. NCKK Human Of Rights Center
16. Platform c
17. Progressive 3.0
18. Progressive Korea
19. Refugee Rights Center, NANCEN
20.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21. Sonjabgo
22. Supporters group for migrant workers movement
23.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24. The People's Action Against Dictator Chun Doo-hwan
25. Green Party